



[뉴스]尹, 수출 전략회의 5대 수출대국 위해 힘 모아야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18.01 (+12.74)	코스닥	725.59 (+13.33)
금리 (미국 3년)	3.849 (+0.005)	환율 (원/달러)	1351.80 (-4.80) (23일)

혁신·효율화에 부는 칼바람... 유통가 곳곳 '노사갈등'

물류센터 통폐합·혁신에 인력 감축 SSG닷컴, 배송인력 계약해지 통보 롯데도 100대 이상 차량 계약해지 노동계 노동권보장 위한 노력 요구 노사갈등에 정부역할 부재 지적

유통가 곳곳에서 노동조합과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 효율화 또는 신기술 도입을 통한 혁신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감축이 이루어지면서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대부분 빠른 속도로 변하는 유통 환경과 기술발전 속에서 필연적인 일인 경우가 많아 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사간 갈등이 잦은 분야는 물류·배송 분야다. 팬데믹을 거치며 e커머스 업계는 '빠르고 정확한 배송 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오픈마켓에서 직배송으로 변한 e커머스들은 많은 물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대형 물류센터와 배송·배달기사를 확충했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고용이 일어났다. 그러나 기술 발달 속도가 빨라져 물류센터의 통폐합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지면서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SSG닷컴은 지난 10월 말 사천·상주·보령·안산TR·양산TR 등 5개 점포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에게 내달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노조의 거센 반발을 맞닥뜨렸다.

롯데는 좀 더 복잡하다. 지난 4월 롯데온을 통한 새벽배송을 중단했고, 7월에는 2시간 내 배송 서비스인 '바로배송'을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100대 이상의 차량에 계약 해지를 진행했다. 이어 4개월 만인 지난 1일, 영국 리테일 테크 솔루션 기업 '오카도(OCADO)'와 손잡고 온라인 장비기 서비스에 출사표를 던지고,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소싱 통합 등을 단행하며 그로서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계약해지와 신규계약이 반복됐다.

이달 17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는 유통업계 전반에 걸친 표준계약서 제정을 촉구했다. SSG닷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양한 온라인 배송주체로부터 발생하는 일인 만큼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28일에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근본적 개선을 위한 고용보장 표준계약서 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노조는 "실적이 악화하자 곧바로 차량 감축에 들어갔는데, 이는 을(乙) 위치일 수밖에 없는 배송 노동자들에게 매출부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이 부진하면 사업을 축소하고, 신기술이 등장하면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명예퇴직 등 제도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와의



메트로신문 '2022 뉴테크놀로지 포럼' 성료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가 23일 서울 중구 페르타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2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계약 방식에 따라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다. 이번 배송차량 해지 또한 유통기업은 배송 위탁계약을 맺은 운수업체와 계약을 하고, 운수업체는 또 배송기사들과 예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측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이 경영 효율화 기술 혁신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반복되는 상황 속

에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히는 요소는 ▲산업 변화와 발전에 따른 노사 갈등에 대해 정부 개입 ▲산별교섭 ▲직업훈련제도 마련 등이다.

지난해 20대 대선 의제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했던 이승윤 중앙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유통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노사 갈등에 정부 역할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복지제도의 압축적인 발전 속에서 정부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유권자들의 일상 복지서비스에 관심을 가졌지만 노동 권리나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논의는 게을렀다"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과정에서는 고객과 자본의 동맹이 이뤄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권의 보호가 밀리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1%대 저성장 경고에도 줄줄이 파업... 韓 경제 어디로

소비·투자 등 내수 얼어붙어 수출 빨간불에도 노동계 파업 내년 성장률 1%대 전망 잇따라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심리도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동계는 24일부터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학교와 지하철, 기차 등 줄줄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어려운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졌는데 물류에 교통대란이 재현될 위기에 놓였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국내외의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며 비관적으로 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 총파업과 관련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 예고했다.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5개월 만에 다시 운송 거부에 나섰다. /뉴스

아섰고,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3일 '2022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통해 전체 산업의 BSI가 전월보

다 1포인트 하락한 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75)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다.

BSI는 기업들의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지수화 한 것으로 기

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지수가 100보다 작다는 건 그만큼 업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기업이 어려운데 노동자들은 일손을 멈추고 거리로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최저임금 성격의 '안전운임제' 연장과 타업종으로 확대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정부, 정치권과의 정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에 이어 25일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과 다음달 2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간다. 급식·돌봄 차질에 교통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급기야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2일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냈다. 기업들이 무역 적자와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상승 등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 총파업을 철저히 달라는 호소였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의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내년부터 1%대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각각 1.8%, 1.9%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 성장률을 1.9%로 예상한데 이어 전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로 하향 조정했다. 이들 기관 모두 고물가와 금리로 인한 내수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등 수출 약화를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3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 이태원 국조특위 野위원 선임 통지
▲ 심상정 "이해충돌 무관 주식 매각·백지신탁"... 국회개혁 5법 발의 /사진 뉴스스

▲ 권은희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輿 책임 더 커"
▲ 경찰 "성희롱 발언 의혹" 최강욱 불송치... 피해자 고소 없어



▲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 박홍근 "與국조위원 미제출 유감... 24일 반드시 처리" /사진 뉴스스